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16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18일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유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KC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말했다.유 전 의원은 유해성이 입증될 경우 국산이든 외국산이든 유통을 금지하고 제조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지만 유해성 입증과 KC인증 획득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필요한 곳에만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유 전 의원은 "값싼 제품을 해외직구 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하면 국내 소비자들이 그만큼 피해를 본다"며 "소비자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하면 경쟁력이 생기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가 원천 금지되는 것을 골자로 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